광주시·전남대, 전국 첫 '이차전지 특성화대' 가동

시·전남대·KIAT, 사업계획 협약
학사급 실무형 인재양성 본격화
4년간 120억 투입 연 50명 배출
융합전공 개설 등 전문체계 구축

광주시와 전남대가 산업계 수요에 맞는 실무형 이차전지 인재양성에 본격 돌입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된 전남대학교와 관련 연구기관, 지역 이차전지 기업들과 함께 이차전지 분야 학사급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전남대학교·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차전지 인력양성 사업계획서를 최정 확정하고, 2일 전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7월 초 교육부의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정 및 지원사업' 공모에서 3개 대학(전남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한양대학교)이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협약에 따라 KIAT는 사업추진에 대한 종합관리와 사업비 지급, 단계별 평가 등 이차전지 분야 학사급 인재 양성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방향 설정을 제시한다.

전남대학교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단계별 사업 추진과 목표 달성 등 사업을 실행한다. 전남대는 1년에 50명 이상의 산업수요형 이차전지 인재를 길러낼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물론 인재양성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세부 사업으로 △이차전지 융합전공 개설 및 운영 △전문장비 구축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우수교원 확보 △기업 연계형 실습 기반조성 등을 추진한다. 또 △취업지원 프로그램 △장학제도 운영 등 우수 인재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학생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대학교는 4년 간 국비 120억원과 함께 전국 최초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이라는 지위를 선점하게 됐으며, 추가로 광주시는 8억원, 전남대는 12억원을 투자한다.

여기에 지역 이차전지 기업, 연구기관들과 함께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기존 전남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차전지 석·박사급 전문인재 양성사업'과 연계해 전문적인 이차전지 인재양성 사다리를 보다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지난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에 이어 올해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광주시의 첨단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산업육성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이 시작되는 첫해인 만큼 기반을 잘 다져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도, 불합리한 규제발굴·개선 방안 모색

공사·출연기관 보고회

전남도는 지난 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주민편의와 지역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공사·출연기관 규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발굴된 규제 안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해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중앙정부 소관 과제는 규제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규제 소관 부처에 건의하고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규제개선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정보 공유와 홍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주민, 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등 직접적인 소통도 확대해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규제개선은 새로운 성장의 토대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출연기관들도 산업과 민생현장을 방문해 도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남도의 규제개선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위안부 피해자 초상화 전시 관람

최지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이 지난 2일 '2024년 기림의 날'을 맞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갤러리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초상화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전남도, 가공식품·농산물·수산물 연중 수거검사

도민 먹거리 안전성 확보

전남도는 연중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식품 수거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에 유통 중인 식품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연간 3500여 건이 진행된다.

주요 대상은 가공식품, 농산물, 수산물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 대상별 기준·규격에 대해 검사한다.

특히 지난 2023년 8월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라 도내 유통중인 수산물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검사수를 기존 90건에서 270건으로 확대·강화했다.

식품 등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관련 업체·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한다.

나소영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기별, 테마별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등 유통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30일까지…2개월령 이상

광주시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광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반려견의 출입이 많은 곳에서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내장형 등록 방식에 한해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4000마리에 한정해 1마리당 3만원(1인당 최대 3마리)을 지원하며, 등록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등록 후 해당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업체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를 막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하반기 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운영

16기 드림청년 470명 대상
5개월간 일경험·교육 진행

광주시 청년 일자리 인기정책인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이 하반기 일경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에 참여하는 '16기 드림청년' 470명을 대상으로 공통교육을 실시, 하반기 일경험의 문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1·2·5일 사흘간 시청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1일차 교육에는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해 직장 내 예절과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을 교육했다. 5개월 간 일경험을 하게 될 드림터(사업장)에서 원활히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팁이 전수됐다.

2일차에는 청년들이 알아야 할 노무상식을 비롯해 일상생활 사례를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등에 대해 알아보고, 궁금한 점을 직접 노무사에게 즉문즉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드림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교육현장을 깜짝 방문했다. 강 시장은 청년들에게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일을 찾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장님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일경험에 참여한 한 청년의 물음에 강 시장은 "가슴 아픈 실패를 많이 경험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공부하고 경험을 쌓으며 기회가 올 때를 기다렸다. 광주시도 청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청년들을 격려했다.

3일차인 5일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직무별 기초교육과 드림터 출근 전 준비사항 등을 전달하며 네트워킹 활동을 진행한다.

16기 드림청년들은 사흘 간 공통교육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5개월 동안 매칭된 260여개 사업장에서 주 25시간씩 일경험을 하며, 현장에서 직무를 경험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한다. 일경험 기간에는 '드림매니저'(전담 매니저)들이 참여 청년과 사업장에 대해 상시 방문하거나 상담을 진행해 청년의 일적응을 돕고 실질적 직무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폭염 취약계층 지원 대책 강화

경로당 무더위 쉼터 3시간 연장
냉방비·유지보수비 등 지원키로

광주시가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 대책을 강화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경로당(무더위 쉼터) 1356개소의 이용시간에 대해 3시간 연장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냉방비와 유지보수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경로당(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은 기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평일·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9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이와 함께 7~8월 두 달 간 경로당 1개소당 냉방비 35만원(월 17만5000원×2개월)을 제공하고 관리비·전기료 등 유지보수비도 일부 지원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5월부터 '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시행 중으로 폭염특보 발효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생활지원사)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서비스 이용 어르신 1만3500여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보호자(친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한 집안 어르신 7000여명의 위험 상황을 재빠르게 감지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호출기를 눌러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거나 활동량 감지기를 통해 쓰러짐이 의심되는 상황을 확인해 안부를 살핀다. 폭염특보 알림 및 음성신고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영화 고령사회정책과장은 "폭염특보 발효되면 외출이나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물 마시기·휴식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병하 기자